원인·구조작업 답답한 사흘…분통터진 국민들

오락가락 침몰 원인에 '음모론' 등 유언비어까지 등장
"자녀 군대 어떻게 보내나"…당국 폐쇄적 자세도 불만

침몰한 지 3일이 지나도록 1천200t 초계함 천안함의 잔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침몰 원인 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군 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군부대 진입을 시도하는 실종자 가족에게 군인들이 총부리를 겨누거나, 부상자 방문을 가로막는 등 군 당국의 폐쇄적인 자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 전역 군인 등도 군 당국의 무성의하고 불투명한 태도에 불신을 표시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원인 모를 침몰, 실종자 가족 분통**=군 당국은 침몰 당시 천안함의 뒷부분에 구멍이 생기면서 침몰했다고 발표했으나, 곧 폭발에 의해 두 동강이 나면서 가라앉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함장 등 58명이 생존했으나, 이들도 폭발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침몰 원인과 과정 역시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국의 도발', '암초 충돌', '내부 폭발' 등의 확인되지 않은 설명이 확산하는 것은 물론 '음모론'과 같은 유언비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군당국의 미흡한 설명에 항의하며 군부대에 진입하려했으나 해군 2함대 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이들에게 총을 겨눈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45분께 생존한 군인들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실종자 가족 100여 명이 취재진과 함께 군부대로 진입, 700여m를 걸어가던 중 7~8명의 무장병력을 태운 군용트럭이 멈춰섰으며, 탑승해 있던 병사 1명이 가족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

실종자 가족들은 군당국의 수색 의지와 진상규명 의지 자체를 불신하며 자체적인 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종자 정종률 대위의 부친 정해균(65)씨는 "함정이 두 동강이 나 침몰했는데도, 군에서는 '구멍이 나 침몰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다, 비공개로 하고 있는 군당국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군에 자녀 보낸 부모들 '불안'**=장남을 해병대에 보냈다는 양모(51·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휴가 나오겠다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전군에 비상령이 내려 못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마음을 놓았다"며 "이렇게 해서야 군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잠이라도 편안히 자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각 언론사 홈페이지나 해군 홈페이지 등에는 천안함 전역자들은 물론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 등이 잇따라 글을 올려 군당국의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조속한 실종자 수색을 요구했다.

광주의 박모(45·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잠수부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에 지원을 요청해 잠수정을 동원해서라도 배 뒷부분을 찾아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군당국의 안일한 구조작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트위터에서는 특히 실종자 구출 작업에 관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 'Febox 64'라는 사용자는 "배가 무거워 어려우면 열탐지기나 소음측정기 같은 걸로 수색해서 사람만 빨리 구출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모두 동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천안함 전역자들의 인터넷 카페엔 추모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전역자는 "탈출훈련은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잘 이뤄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그 같은 자세가 사고를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연합뉴스

"내 아들 찾아내라" 천안함 침몰 사흘째인 28일 실종 장병의 부모들이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내 아들 찾아내라"며 울부짖고 있다.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생존 시한 오늘 오후 7시"

■실종 46명 생사는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흘째가 되면서 실종된 장병 46명의 생존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밀폐된 함내 공간에 머물러 있을 경우, 최대 69시간까지는 생존 가능하다는 해군 측의 분석이 나왔을 뿐 아니라 실종 장병과 가족 간 휴대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는 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해경과 해군 등은 사고가 난 26일 밤 9시45분이후 함정· 경비정· 헬기 등을 동원해 사고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28일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순간 폭발로 급속히 침몰된 선미 부분의 기관실과 침실 등이 자동 밀폐되면 함내 공간에 최대 69시간 생존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돼 실종자 가족들의 기대를 부풀게 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군 당국이 '사고 당시 밀폐 가능한 침실에 머물러 있었던 탑승자는 21명 정도로, 통상 공기 중에는 17%의 산소가 있으며, 21명이 호흡할 경우 최대 69시간쯤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여기에 28일 일부 실종자 가족이 실종 장병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한때 생존설이 힘을 받았다.

실종명단에 포함돼 있는 심영빈 하사의 부친은 이날 오후 3시께 사고해역 해상의 초계함에서 "휴대전화에 아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부재중 통화목록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실종자 가족들이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심 하사 부친 휴대폰 확인결과, 심 하사 부친이 전화를 걸었던 목록만 있을 뿐 걸려온 전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형호기자 khh@·연합뉴스

조류·파도 악조건에 기술적 어려움…한달 이상 걸릴 듯

■인양 언제 어떻게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밝혀줄 해법으로 등장한 함정 인양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외부의 충격이냐, 내부 폭발이냐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도 함정을 끌어낸 뒤 '과학의 방법'으로 분석해보면 침몰의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천안호를 인양해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함정 인양을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함정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수색을 우선해야 하는데다 1천200t이라는 함정 무게를 감안하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은 사상 최대 규모의 참사로 추정되는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일단 함정이 수장된 상태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를 대거 투입해 사고 기초조사와 실종 장병 확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함정 인양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종자가 46명에 달하는 데다 함정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함정 지하 각 선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군의 판단이다.

실종 장병 수습이 끝나면 본격적인 인양 작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선 다목적 구조함과 수중탐색장비, 바지선, 해상크레인 등이 필수이지만 함정 규모가 그간 우리 해군이 인양했던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해군은 지난 2002년 제1차 서해교전에서 격침된 130t급 고속정 참수리 357호를 침몰 53일, 인양작전 17일 만에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역은 물살이 약해지는 하루 두 차례 2시간 동안만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참수리 357호는 130t 규모에 불과했는데도 17일의 인양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규모상으로 9배에 육박하는 천안함을 끌어올리는 데는 더욱 정교한 기술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이기식(해군준장) 합참 정보작전처장도 지난 27일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가 가진 크레인이 천안함을 인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끝난 뒤에 정확한 인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고 해역의 환경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5월은 되어야 사고조사와 실종장병 수색을 끝내고 함정 인양이 완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과거 인양 작업을 고려하면 천안함 인양에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계 제로…SSU요원 3분만에 철수

지난 26일 서해상에서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호에 대한 군의 탐색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군은 고도로 훈련된 특수 잠수부대인 해군 해난구조대(SSU)를 사고 해역에 급파해 선체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군은 이에 따라 천안함 탐색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 민간인 다이버들까지 참여시킬 방침이지만, 실종자 대부분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선체 뒷부분 탐색작업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탐색작업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해역의 빠른 조류와 갯벌 형태의 바닥 때문이다.

사고 해역의 조류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중에서 더욱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투입된 해난구조대(SSU) 요원들이 입수 3분만에 탐색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정도다.

당시 SSU 요원들은 조류가 어느 정도 멈추는 '정조' 시간에 맞춰 사고 해역에 입수했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록 생각보다 조류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더 이상 수색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색을 강행할 경우 자칫 회오리 형태의 '수중와류'에 의한 2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조치다.

사고 해역의 바닥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갯벌 수준이라는 점도 군으로서는 고민이다. 이 경우 수중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평 폭발음과 함께 선체 두동강 함정 후미 순식간에 물에 잠겨"

■생존자들 증언으로 재구성한 '침몰 순간'

천안함은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지난 26일 오후 9시15분께 원인을 알수 없는 폭발과 함께 선체가 두동강 난 뒤 후미부터 순식간에 침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함 생존자들은 지난 27일 오후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실종자 가족 300여명에게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나선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과, 대위 1명, 상사 2명, 사병 1명 등 5명의 증언을 토대로 침몰 사고 당시를 재구성 해 보면 다음과 같다.

26일 밤 9시15분께 백령도 인근 해역을 항해중이던 천안함 후미에서 '평' 하는 소리와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로 인해 장병들의 몸이 순간적으로 튀어오르고 엔진이 꺼졌고, 함정내 전기도 끊겼다.

칠흑같은 바다 한 가운데서 정전사태와 통신 등 교신 수단까지 끊겨 함정 내부는 암흑속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고당시 승무원 절반 가량은 선체 상부에, 나머지는 선체 하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폭발로 선체는 두동강이 나면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으며, 후미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 함장은 "밤 9시15분께 당직근무를 마치고 함장실에서 작전계획을 검토중인데 '평' 소리와 함께 선체가 직각 형태로 오른쪽으로 기울었고 몸이 50㎝가량 튀어 올랐다"며 "이후 발전·통신 등 모든 교신수단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함장실에 5분가량 갇혀 있다 밖에서 망치로 출입문을 깨 줘 밖으로 나오게 됐다"며 "나와보니 함정 후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폭발로 배가 두동강이 났다"고 밝힌 최 함장은 폭발이후 선체 후미가 침몰될때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 '순식간'이라고 설명했다. 함정이 기울어지면서 침몰하자 생존자들은 여기저기에서 로프와 소방호스 등을 이용,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장병들을 구해 냈다.

배가 기울면서 함정 상부로 몰려나온 생존자들은 구조를 요청하다 바닷물로 뛰어내리거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밤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역에서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뒤집힌 채 선수 부분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옹진군청 제공〉

해상 경계 1200t급 군함…1989년 취역

■초계함 천안함은

천안함은 해군 평택 2함대사령부에 배속된 1천200t급 초계함(哨戒艦)이다.

초계함은 적의 습격에 대비해 해상을 경계하는 군함으로, 우리 해군은 3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취역한 천안함은 전장이 88m, 전폭 10m이며 최고속력은 32노트(시속 57.6㎞), 항속거리는 4천나노마일(7천200㎞)에 달한다.

추진기관은 디젤 2기와 가스터빈 2기를 사용하며, 대함미사일과 폭뢰, 76㎜와 30㎜, 40㎜ 함포, 어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초계함 승무원은 100여명 안팎이며 이날 사고가 난 천안함에는 104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서해상을 사수하는 제2함대사는 초계함과 함께 3천500t급 구축함, 2천t급 호위함, 최신예 유도탄고속함(PKG) 윤영하함, 일반 고속정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